

East Asian Security in the Multipolar World Order: A Review on the Security Threat Assessment of the Korean Peninsula Amid the Restructuring of International Order

Sungwon Le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U.S.-led international order, sustained by overwhelming national power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is gradually being restructured from a unipolar international system to a bipolar international system or a multipolar international system, coupled with the weakening of U.S. global leadership and the rise of regional powers. Geopolitically, discussions have been constantly raised about the security instability that the reshaping of the international order will bring about, given that East Asia is a region where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nd regional powers sharply overlap and conflict.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analyze whether security discussions in Korea are based on appropriate crisis assessment and evaluation.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security crisis theory emerging in Korea tends to arise due to threat exaggeration and emphasizes the need for objective evaluation and conceptualization of the nature and the level of threats that the restructured international order can pose to regional security. Based on the analysis of changes in conflict patterns (frequency and intensity), occurring in East Asia during the periods divided into a bipolar system (1950-1990), a unipolar system (1991-2008), and a multipolar system (2009-current), this study shows that East Asia has not been as vulnerable to power politics as other regions. This investigation emphasizes that the complexity of Korea's diplomatic and security burden, which are aggravated by the re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order, do not necessarily have to be interpreted as

* Lecture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leesungwon84@gmail.com

a grave security threat. This is because escalating unnecessary security issues could reduce the diplomatic strategic space of the Republic of Korea.

Keywords

Geopolitics, Multi-polar International System, East Asian Security, Global Power Politics, Threat Perception.

다극체제와 동아시아 안보: 국제질서 재편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협 논의의 재고찰

이성원*

충북대학교

요 약

냉전의 종식 이후,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유지되어왔던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와 지역 강대국들의 부상이 맞물리면서, 점차 단극체제에서 양극체제 또는 다극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는 미국 뿐 아니라 지역 강대국들의 국익이 첨예하게 중첩되고 대치되는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질서의 재편이 가져올 안보 불안정 상황에 관한 논의가 끈임없이 제기되어져 왔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안보 논의가 적절한 위기 인식과 평가에 근간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대두되는 안보 위기론이 과대 위협 인식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국제질서의 재편이 지역 안보에 가할 수 있는 위협의 본질과 수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개념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양극체제 (1950-1990), 단극체제 (1991-2008), 다극체제 (2009-현재)로 구분되는 기간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양상(빈도와 강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무력 분쟁’의 관점에서, 동아시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국제질서 재편에 크게 취약하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유지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인해 가중되는 외교·안보적 부담과 복잡화된 손익 계산이 반드시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해석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다. 불필요한 안보 이슈 확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전략 공간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지정학, 다극체제, 동아시아안보, 패권 경쟁, 위협 인식

*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이메일: leesungwon84@gmail.com.

I. 서론

국제정치체제의 재편은 분쟁을 야기하는가, 평화를 불러오는가? 2022년 현 시점에서, 국제사회는 큰 혼돈 속에서 국제 질서의 재편을 경험하고 있는 듯하다. 패권국가 간 경쟁이 정치, 경제, 군사, 이념 전 영역에 걸쳐 가시화되고 있다. 더욱이, COVID-19 라는 범지구적 감염병 사태는 국가 간 소통의 단절을 심화시켰고, 민주주의 퇴보와 권위주의 정권의 확산에 일조했다고 평가된다(Cassani, 2021; Repucci and Slipowitz, 2021; Thananithichot and Kongdech, 2021; Daly, 2022). 종식되었다고 여겨졌던 이념과 가치의 대립이 세계적 차원에서 다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존 아이켄베리가 묘사했던 냉전 이후 한세기를 주도해온 미국의 헤게모니,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도전 받고 있는 형국이다 (Ikenberry, 1998; Muhr, 2018; Ashraf, 2020). 세계 전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무력 분쟁이 국제질서의 재편과 무관하지 않으며, 기존의 국제질서가 양극 또는 다극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이라 간주되고 있다(Sadri and Burns, 2010; Chan, 2013; Burgess, 2016; Kuzmarov and Marciano, 2017; Sakwa, 2019; Kupchan, 2021).

현시점의 국제질서를 규정함에 있어서, 분석의 관점과 견해에 따라 크게 단극, 양극 또는 다극체제와 같은 전통적인 국제정치체제 유형화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 속에서 놓여 있는가?” 또는 “어떤 과도기에 놓여 있는가?” 라는 질문에, 모두가 인정하는 명쾌한 답을 구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국제정치체제를 바라보는 세계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는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 학술 저널 데이터 베이스인 SCOPUS에 탑재된 학술 논문의 서지학 정보(Bibliographic information)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를 그림 1의 인포그래픽(Infographic)에 담았다. 이 인포그래픽은 2021년 사회과학 분

야에서 출판된 ‘국제질서’ (International order)와 연관된 2,000 편의 학술 논문들을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발견되는 연구 경향을 보여준다. 다양한 특징이 관찰될 수 있으나, 두드러지는 한 가지 특징은 국제질서와 연관된 연구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 러시아, 유럽, 인도, 일본과 같은 지역들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빈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 특별히 중국은 국제질서와 관련해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단어로 나타났다. 이 인포그래픽이 온전한 과학적 모델은 아닐지라도,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현 국제 학계의 시선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질서는 다극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국제질서를 해석하는 국제사회의 관점은 그러하다.

1) 그림 1은 ‘국제질서’와 연관된 연구에서, 검색된 단어의 사용 빈도와 단어 간 연관성을 보여준다. 원의 크기가 클수록 단어의 사용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 간 거리는 단어 간 연관성의 수준을 나타낸다. 두 원의 거리가 짧을수록, 두 단어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함께 상당 부분 수정되어 왔다 (민병원, 2014). 하지만, 다양한 지역 강대국 간 패권 경쟁과 블록화가 심화되는 현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적 차원의 무력 분쟁 발발은 다시금 국제정치체제의 변화가 분쟁과 평화에 불리할 영향력에 대한 학계의 논의를 재점화 시키고 있는 듯하다 (Buzan, 2021; Cottey, 2021; Tyushka, 2022).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안보 정세는 어떠한가? 이 지역 역시 국제 질서의 재편과 더불어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스모겐소가 지적하듯, 지난 수천 년간 동아시아 특별히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지리적으로 충돌하는 요충지였으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강대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중첩되고 대립되어 왔다 (Morgenthau, Thompson and Clinton, 1985).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안보 논의는 대체로 패권 질서의 변화라는 큰 틀에서 지정학적 또는 지경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중소국가의 필연적 운명일지 모르나, 강대국간 힘의 경쟁, 연합, 전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국제 질서의 재편이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되어지는 경향이 존재해 왔으며, 자연스럽게 패권 질서의 구도 안에서 국가의 생존 전략이 활발히 모색되고 논의되어 왔다.

강대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치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중소국가 가 자주적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고, 잠재적인 외교·안보 위협 요인을 억제하는 국가 전략을 모색하고 수립하려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은 정확한 위기 인식과 평가이다. 김학노의 연구(2019)는 한반도의 안보를 논함에 있어서, 강대국의 이익이 상충되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지정학적 통념이 실제 위협의 수준보다 과장된 위협 인식을 재생산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안보 논의가 적절한 위기 인식과 평가에 근간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한다. ‘안보’라는 단어가 갖는 포

괄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안보 위협을 지칭함에 있어서 그 대상과 수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안보 논의의 첫 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이 연구는 ‘무력 분쟁’이라는 관점에서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 간 무력 분쟁의 빈도와 강도가 국제질서의 재편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안보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학문적,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한다. 논의의 요점은 극체제 변화가 지역 안정에 가하는 위협의 본질과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의 필요성이다. 이 글은 국제질서의 재편이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한 무비관적 또는 과장된 평가가 불필요한 안보 위협론을 확대하고 재생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다극체제로의 국제질서의 재편이 발생시킬 수 있는 정치, 경제, 안보적 소음(noise)을 곧 바로 닥칠 중대한 안보 위협 또는 구조 환경으로 인식하는 논의 전개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전략 공간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조한승 (2005)은 그의 연구에서 국가 간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쟁은 전쟁을 의미하는 무력 마찰의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고 종식되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한다. 분쟁의 수준은 무력이 포함되지 않은 낮은 수준의 분쟁에서 무력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적대 행위까지 상승적 단계를 거친다(Jones, Bremer and Singer, 1996).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연관해 이루어진 지역 안보 논의의 주요 경향과 특징을 분석한다. 세 번째 섹션에서, ‘분쟁’의 관점에서 국제질서의 재편이 동아시아 지역에 가한 실제적 안보 위협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몬티 마살이 고안한 <정치적 폭력의 주요 에피소드와 분쟁 지역, 1946-2018> (원제: Major Episodes of Political Violence, 1946-2018) 데이터가 활용되었다 (Marshall, 2020).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형성했던 양극체제

(1950-1990), 냉전 이후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 (1991-2008), 그리고 금융위기와 더불어 지역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이 가시화되는 시기인 다극체제 (2009-현재)로 시대를 구분하여, 각 시대 별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분쟁 양상 변화를 분석한다. 또한, 이 섹션에서는 ‘분쟁’의 관점에서 국제질서의 재편이 동아시아에 안보 위기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구조적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서구의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축적된 전쟁학 이론의 동아시아 적용의 적실성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논한다. 이어서, 네 번째 섹션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동아시아의 분쟁을 분석한 선행 연구와 비교함으로써 이 연구가 제시하는 분석 결과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섯 번째 섹션은 본 연구의 한계와 의의를 함께 논한다.

II. 안보 논의 동향

무정부적 국제질서 속에서, 개별 국가들이 지닌 힘의 비대칭성이 각 국가들의 행동 양식(동맹, 연합, 편승, 중립, 중재)과 패권에 미치는 체계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현실주의자들은 강대국 간의 힘의 배분 정도의 변화(세력균형), 또는 강대국과 도전국 간 일어나는 힘의 도치(세력전이) 현상이 분쟁과 평화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설명한다. 이러한 접근은, 냉전과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치체제의 변혁을 설명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왔다. 국제정치체제의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지만, 기본 유형으로 극(Polarity)을 구성하는 강대국의 수에 따라 단극, 양극, 다극체제로 크게 분류가 가능하며, 각 국제정치체제가 분쟁과 평화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세력 균형의 관점에서 다수의 학자들은 다극체제가 가장 안정적인 구조라고 설명한다. (Kaplan, 1957; Deutsch and Singer, 1964; Morgenthau, Thompson and Clinton, 1985). 이들은 극을 구성하는 강대국의 수가 적을 수록, 국제시스템 내의 세력 간 견제 수준이 높아져, 무력 분쟁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았다. 또한, 극의 수적 증가를 국제체제의 불확실성의 비례적 증가로 해석한다. 증가된 국제체제 내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 국가로의 힘의 편향을 줄이기 위한 국가들간 상호 작용(동맹)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동맹의 확장은 전쟁 발발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다극체제의 안정성을 옹호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 일부는 다극체제 하에서 분쟁 발생 시 동맹국의 연이은 분쟁 개입 가능성 증가로 인해 전쟁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반론을 제기한다 (Christensen and Snyder, 1990).

국제정치체제 내의 불확실성의 증가가 전쟁 가능성을 약화시킨다고 보는 관점과 대조적으로, 케네츠 왈츠와 존 미어샤이머와 같은 학자들은 다극체제에서의 불확실성이 필연적으로 국가 간 군사적 마찰 가능성을 가중시킨다고 보았으며, 전쟁 발발의 가능성은 두 강대국이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즉 양극체제 하에서 가장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양극체제에서, 권력의 비대칭을 야기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강대국 간의 중재가 양 극간 안정적인 힘의 균형을 유지하게끔 한다고 설명한다 (Waltz, 1979; Mearsheimer, 1990).

반면, 세력 전이 이론은 강대국간 힘의 균형이 전쟁 가능성을 낮춘다는 세력 균형 이론의 전제를 공유하지 않는다 (Organski, 1968). 반대로, 강대국 간 비등한 힘의 균형은 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한 국가가 압도적인 힘을 지녔을 때, 국가간 전쟁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로, 로버트 길핀과 로버트 코헤인은 국제체제 내에 강대국의 증가가 국가 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변수의 비례적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체제의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며, 국제정치체

제는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지닌 강대국으로 국력이 집중될 때, 국제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Gilpin, 1981; Keohane, 1984). 윌리엄 월포스 또한 단극체제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주목한다. 그는 단극체제 하에서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권력 균형의 필요성이 감소하여, 패권 경쟁으로 인한 전쟁 가능성이 낮게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Wohlforth, 1999). 조셉 나이 역시 기존 국제정치체계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단극 체계모니를 가장 안정적인 체제로 꼽는다 (Nye, 1992). 반면 누노 몬테이로는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는 미국 역사의 1/10을 차지하지만, 이 시기 미국의 전쟁에 1/4이 발발했음을 보여주며, 단극체제가 분쟁에 취약한 구조라고 주장한다 (Monteiro, 2011).

국제학계의 ‘국제질서의 변화 속 분쟁과 평화’라는 연구 패러다임은 국내 안보 연구에서도 주류의 분석 시각으로 자리잡았다. 앞서 거론했듯이 동아시아 지역, 특별히 한반도는 강대국의 이익과 영향력이 중첩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해석되어 왔고, 다수의 국내 연구들이 인접한 강대국 간 힘의 균형과 변화가 한반도 안보 정세에 불러올 파급 효과에 주목한다 (김상태, 2006; 김강녕, 2011; 김수민, 2012; 김상기, 2014; 전재성, 2014; 박인휘, 2020). 본 섹션에서는 국내 안보 논의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연구 경향과 특징 그리고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함께 논하고자 한다.

최근 연구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특징은, 미-중 패권 경쟁의 틀에서 안보 문제를 접근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은 국제적 차원에서도 안보 논의의 중심에 있다. 지리적, 역사적 인접성으로 인해, 국내 연구 역시, 미-중 간 패권 경쟁은 한반도 안보에 구조적 위협 요인으로 인식되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김재관, 2006; 박창권, 2013; 김일수, 2014; 전봉근, 2017; 김강녕, 2018; 곽덕환, 2020; 박용수, 2020; 이성현, 2020; Sun, 2021).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에서의 영향력 축소를 가져왔고, 양극체제를 형성하면서 안보의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중국과 미국의 우발적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큰 안보 위협으로 조명한다 (정경영, 2012; 박창희, 2013; 신종호, 2014; 황재호, 2014; 이상택·윤성석, 2016; 차정미, 2017). 더불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패권 경쟁에 일본과 러시아와 같은 지역 강대국들 간의 이합집산과 경쟁적으로 형성되어 대립되는 연대가 ‘동적인 세력균형’ 상태를 이루고, 역내 복잡화되는 패권 경쟁과 국제관계가 한국에 가중된 안보 딜레마를 가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최태강, 2014; 김동성·정성희, 2016; 정한범, 2016; 신재길, 2018; 조경근, 2020; 허원영, 2020). 패권 경쟁 속에서 안보 불안정성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에 대해, 일부는 역내 국가들의 잔존하고 있는 팽창적 제국주의적 성향과 과열된 민족주의가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조명한다 (송주명, 2005; 이삼성, 2008; 조립신, 2012; 김태형, 2014; 이근욱, 2017). 일부 연구는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군비경쟁의 관점에서, 한반도 안보 취약성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김강녕, 2011; 김수민, 2012; 임재형·이성우, 2019; 조경근, 2020; 송세관, 2021). 또한, 상충되는 강대국의 이해 관계를 제도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역내 안보 협력체의 부재가 가시화된 패권 경쟁의 파급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윤황, 2010; 이승근, 2018; 이정우, 2018; 박형준, 2019).

둘째로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은 안보 논의가 북한의 위협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다수의 국내 연구들이 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체제 불안정이 야기하는 위협을 역내 강대국 간 힘의 균형 변화와 연결해 접근하고,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박성화, 2006; 이수형, 2012; 신동만, 2015; 전봉근, 2017; 전성훈, 2018; 박용한·곽은경, 2020; 박인휘, 2021). 하지만, 강대국 간 힘의 균형의 변화가 초래하는 구조적 안보 환경의 변화가 북한 위협의

심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세번째로, 패권 경쟁이라는 틀 안에서 중점적으로 전개되어 온 안보 논의의 주요 화두는 ‘한국의 생존 전략’의 모색이다 (김상배, 2011; 반길주, 2020; 현인택, 2021). 지정학적으로 대치되는 강대국의 이익 사이에서, 한국이 마주한 안보 딜레마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생존 방안은 미국으로 또는 중국으로의 편승, 현상유지, 홀로서기, 중립화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어 왔다 (Chung, 2006; Han, 2008; Kang, 2009; 박창권, 2013; 김상기, 2014; 변창구, 2016; Moon, 2017; 박휘락, 2017; Cha, 2020; 박인휘, 2020; Sun, 2021).

국내 안보 논의는 다각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이론적, 정책적 축적을 이루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화된 안보 연구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 몇 가지 측면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부분이 없지 않다. 국내 안보 논의에서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다수의 연구가 강대국의 패권 경쟁과 재편되는 힘의 역학 관계가 지역에 초래할 안보 딜레마와 안보 위협에 대해 논하지만, 정확히 어떤 안보 위기 상황을 전제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모호한 경향이 발견된다. 일부 연구들은 국제질서의 변화가 한반도에 초래할 “대규모 위기”, “중대한 위기”와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안보 위기 상황을 상정하는지, 그러한 상황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전개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둘째로, 국제질서 재편이 초래하는 구조적 환경의 불안정과 역내에 잠재하고 있거나 만성화된 안보 위협 요인을 구분 없이 혼용해 개념화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내부에서 생성되는 다차원적 외교·안보적 불안정 요인을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극체제의 변화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정을 파생시키는 것인지, 동아시아에

내제되어 있던 안보 불안정 요소가 적절히 해결되지 못했을 때, 강대국의 패권 경쟁을 지역으로 흡수하는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명확하지 않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의 구조적 차원의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을, 미결된 역내 안보 문제의 심화와 동일시하거나, 당위적 인과관계로 전제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러한 경향과 연결되어 발견되는 또 다른 안보 논의의 문제점은, 국제질서의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안보 위협론이 제기되지만,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발견되는 역내 국가들의 행위 양태와 패턴이 무력 분쟁 가능성에 어떤 인과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연구들이 체계적인 이론화 작업을 시도하였다.²⁾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연구들은 국제질서의 변화와 개별 국가의 행위 패턴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차원의 논의보다는, 예측(scenario-based)에 기반한 의견 게재(opinion piece)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적 차원의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안보 사이의 상호 민감성과 증대성에도 불구하고, 극체제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한반도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근거가 필요 없는 전제나 가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안보 논의의 학문적 토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2) 예로 이수형 (2008)의 연구는 국제체제 변화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동맹의 유형과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을 논한다. 그는, 동맹을 정치형, 주둔형, 능력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의 동맹이 다극체제, 양극체제, 그리고 단극체제 하에서 각각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경향과 특징을 제시한다. 정구연 (2020)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확대와 상대적 미국의 역내 공약 및 세력의 약화로 야기되는, 역내 양극체제 심화와 안보 환경의 변화가 아세안 국가의 강대국 외교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해징'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조비연 (2021) 역시, 미중 양자 관계 하에서 역내 국가들인 균형과 편승 행태를 분석한다. 김선재 그리고 김수환의 연구(2022)는 미·중 경쟁의 영향 속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동아시아 중소국인 대만의 외교 전략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분석한다.

Ⅲ. 국제질서 재편에 따른 동아시아 안보 정세 변화 분석

1. 분석 방법

국제 학계에서 국제정치체제의 변화가 국가 간 분쟁 발발 가능성에 미치는 양적·질적 분석은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되었다. 국내에서도 몇몇의 연구가 극체제의 변화가 체제 안에 존재하는 국가들 간의 분쟁, 동맹, 협력 양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양적 분석을 진행해, 이론화를 꾸준히 시도해 왔다(장원의·김우상·이상훈, 2007; 홍우택, 2007; 송운진, 2017). 관련 국내 연구들은 대체로 극체제 변화와 분쟁의 관계성을 특정 지역적 차원이 아닌, 국제적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분석해 일반적인 이론을 도출하는데 그 초점이 있었다. 하지만, 서구식 경험과 분석에 근간한 이론을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적용해, 현상을 진단하는 방법론적 한계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예로, 전재성은 그의 연구(2014)에서 동아시아 지역 질서는 범지구적 차원의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나름의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관점에서,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초점을 맞춰 극체제의 변화가 역내 분쟁 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적인 분석이 새롭게 시도되어지고, 이론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 질서와 안보 정세의 변화에 대한 논의의 다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을 갖는다. 이를 위해, 양극체제(1950-1990), 단극체제(1991-2008), 다극체제(2009-현재)으로 구분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동아시아의 안보 질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무력 분쟁’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Center for Systemic Peace가 제공하는 Armed Conflict and Intervention (ACI) Datasets의 일부인 Major Episodes of Political Violence, 1946-2018를 활용하여 각 국제정치체제 (양극, 단극, 다극)의 기간 동안, 동아시아 지

역의 분쟁 양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추적한다 (Marshall, 2020)³⁾. 데이터 상에서 정치적 폭력(political violence)은 분쟁의 참여 주체, 지역적 범위, 성격에 따라, 국제 폭력(international violence), 국제 전쟁(international war) 국제 독립 전쟁(international independence war), 시민 폭력(civil violence), 내전(civil war), 인종간 폭력(ethnic violence), 그리고 인종 전쟁(ethnic war)의 7가지 범주로 나뉜다. 각 유형의 무력 분쟁 강도는 1부터 10까지 범위로 측정되었고, 해당 국가 해당 년도에, 앞서 규정한 분쟁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관측치는 0으로 입력되었다.⁴⁾ 본 연구는 국제 폭력(international violence)과 국제 전쟁(international war)의 발생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제시한다.⁵⁾ 무력 분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어진다. 첫째로, 분쟁 발생 빈도의 변화이다. 국제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분쟁 발발이 더욱 빈번해졌는지, 또는 둔화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무력 분쟁의 강도이다. 국가 간 분쟁이 단순한 국지적 충돌인지 또는 전면전의 양상을 띠는지를 국제질서의 변화의 관점에서 시기 별로 분쟁의 강도를 비교해 볼 것이다.⁶⁾

-
- 3) Major Episodes of Political Violence, 1946-2018 데이터세트의 관측치는 2018년까지 기록만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 분석에서 2018년 이후의 관측치는 제외되었다.
 - 4) Major Episodes of Political Violence, 1946-2018 데이터세트는 조직화된 그룹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한 치명적인 정치적 폭력으로, 500명 이상의 사상자를 야기한 정치적 폭력 사건(episode)을 국가 별로 기록하였다.
 - 5) Major Episodes of Political Violence, 1946-2018 데이터세트는 정치적 폭력(international violence)과 국제 전쟁(international war)이라는 용어 사이의 개념적 구분을 지음에 있어서 군사 조직의 수준, 전술·전략의 특징, 기획된 무력 사용의 수준이 고려되었다고 명시한다. “전쟁”이라는 표현은 보다 강력한 제도화된 구성요소를 지니고, 명확한 목표를 수반하고 있다.
 - 6) 본 데이터에서 동아시아로 구분된 국가는 동남아시아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와 동북아시아 (중국, 몽골, 싱가포르 한국, 북한, 일본) 14개국을 포함한다.

2. 분석 결과

2.1. 양극체제(1950-1990) 하에서 국제 무력 분쟁의 빈도와 강도

아래 표 1은 미-소간 양극체제로 규정되는 냉전 기간(1950-1990) 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발한 국제 무력 분쟁의 양태(분쟁의 빈도와 강도)를 다른 지역(중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과 비교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표 1. 양극체제(1950-1990) 하에서 국제 무력 분쟁의 빈도와 강도

지역	국제 무력 분쟁의 빈도		국제 무력 분쟁의 강도			
	국제 폭력	국제 전쟁	국제 폭력		국제 전쟁	
	International violence	International war	International violence	International war	International violence	International war
			기간내 전체 평균	분쟁 시 평균	기간내 전체 평균	분쟁 시 평균
동아시아	43	24	0.12	1.42	0.16	3.54
중동아시아	8	52	0.02	1.25	0.46	4.69
유럽	20	15	0.04	1.55	0.05	2.73
아프리카	32	11	0.03	1.09	0.02	3.09
남아메리카	-	1	-	-	0.002	1

출처: Marshall, M.G. (2020) 'Major episodes of political violence (MEPV) and conflict regions, 1946-2018', 데이터 분석치 토대로 저자 정리

1950-1990년의 기간 내 동아시아 지역 내 국제 폭력의 평균 강도에 대한 측정치는 0.12, 국제 전쟁의 측정치는 0.16으로 관측되었다. 같은 기간 중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 폭력은 0.02, 국제 전쟁은 0.46로 나타났다. 양극 체제 하에서 유럽에서 발발한 국제 폭력의 평균 강도는 0.04, 국제 전쟁은 0.05로 관측되었으며, 아프리카에서의 국제 폭력은

0.03, 국제 전쟁은 0.02로 나타났다. 남미의 경우, 같은 기간 국제 폭력은 관측되지 않았으며, 역내에서 국제 전쟁이 1회 발발하였다.⁷⁾ 국제 폭력과 국제 전쟁 변수의 데이터상 전체 관측치에 대한 지역 별 평균 값은 해당 기간(1950-1990) 동안 분쟁이 없었던 관측치를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이 지표는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이 일반적으로 얼마만큼 무력 분쟁에 취약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반면, 무력 분쟁이 발발하지 않았던 관측치를 제외한 평균 값은, 역내에서 분쟁 발발 시에 보이는 무력 분쟁의 평균 강도를 보여준다. 결과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냉전 기간 동안 국제 폭력이 발생했을 때, 평균 강도는 1.42, 국제 전쟁 발생 시 평균 강도는 3.54 관측된다. 중동아시아의 경우, 국제 폭력과 국제 전쟁의 측정 값은 각각 1.25와 4.69이며, 유럽은 1.55과 2.73로 나타났다. 아프리카의 경우, 같은 시기 분쟁 발발 시, 국제 폭력의 평균 값은 1.09, 국제 전쟁의 평균 값은 3.09로 관측되었다. 남아메리카에서 일어난 국제전의 강도는 1을 기록했다. 국제 무력 분쟁의 빈도라는 측면에서 표 1의 결과 값을 분석하자면, 냉전 시기 양극체제 하에서 동아시아는 24회 국제 전쟁을 경험했다. 반면, 같은 시기 중동은 52회의 국제 전쟁을 경험했고, 유럽은 15회, 아프리카는 11회, 남미는 1회의 국제 전쟁을 경험한다.

2.2. 단극체제(1991-2008) 하에서 국제 무력 분쟁의 빈도와 강도

아래 표 2는 탈냉전시기(1991-2008)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 하에서, 지역 별로 경험한 분쟁의 양상을 보여준다. 데이터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은 1991년부터 2008년 사이 5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국가 간 무력 분쟁(국제 폭력과 국제 전쟁)이 관측되지 않았다. 반면, 중동아시아의 경우, 기간 내 국제 폭력의 평균 값은 0.03이며, 분쟁 발발 시

7) 1982년 아르헨티나-영국간 발생한 포클랜드 전쟁.

국제 폭력의 강도는 평균 1.29로 기록되었다. 국제 전쟁의 경우, 기간 내 국제 폭력의 평균 값은 0.22이며, 전쟁 발발 시에 평균 강도는 4.38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유럽 지역의 국제 폭력의 평균 값은 0.01으로 나타났으며, 분쟁 발발 시에 국제 폭력의 평균 강도는 3으로 관측된다. 국제 전쟁의 경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관측치를 포함한 평균값은 0.003, 전쟁 발생 시로 관측치를 제한했을 때 평균값은 1로 나타났다. 아프리카의 국제 폭력의 기간 내 전체 평균 값은 0.02, 분쟁 시 평균은 1.5로 관측되었으며, 국제 전쟁의 경우 기간 내 전체 평균은 0.02, 분쟁 시 평균은 5로 기록되었다. 남아메리카는 해당 기간 내 국제 폭력의 평균 값은 0.01 분쟁 시 평균은 1로 나타났으며, 국제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중동아시아의 경우 1991년부터 2008년까지 7회의 국제 폭력과 16회의 국제 전쟁을 경험했다. 같은 기간, 유럽에서 1회의 국제 폭력과 2회의 국제 전쟁이 발발했으며, 아프리카는 14회의 국제 폭력과 3회의 국제 전쟁을 경험했다. 결과를 토대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은, 단극 체제 하에서 중동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상대적으로 분쟁에 취약했던 반면 동아시아와 남아메리카 그리고 유럽은 분쟁의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표2. 단극체제(1991-2008) 하에서 국제 무력 분쟁의 빈도와 강도

지역	국제 무력 분쟁의 빈도		국제 무력 분쟁의 강도			
	국제 폭력	국제 전쟁	국제 폭력		국제 전쟁	
	International violence	International war	International violence	International violence	International war	International war
			기간내 전체 평균	분쟁 시 평균	기간내 전체 평균	분쟁 시 평균
동아시아	-	-	-	-	-	-
중동아시아	7	16	0.03	1.29	0.22	4.38
유럽	1	2	0.01	3	0.003	1

아프리카	14	3	0.02	1.5	0.02	5
남아메리카	2	-	0.01	1	-	-

출처: Marshall, M.G. (2020) 'Major episodes of political violence(MEPV) and conflict regions, 1946-2018', 데이터 분석치 토대로 저자 정리

2.3. 다극체제 (2009-현재) 하에서 국제 무력 분쟁의 빈도와 강도

표 3은 2009년 이후로 전개되고 있는 다극적 국제질서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무력 분쟁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 기간 역시, 동아시아 범주에 포함된 14개국은 몬티 마샬의 데이터에서 규정하는 국가간 무력 분쟁을 경험하지 않았다 (Marshall, 2020). 같은 기간,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도 국제 무력 분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중동아시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전쟁에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아시아는 2회의 국제 전쟁을 경험했고, 전쟁 발발 시 평균 강도는 6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표3. 다극체제 (2009-현재) 하에서 국제 무력 분쟁의 빈도와 강도

지역	국제 무력 분쟁의 빈도		국제 무력 분쟁의 강도			
	국제 폭력 International violence	국제 전쟁 International war	국제 폭력 International violence		국제 전쟁 International war	
			기간내 전체 평균	분쟁 시 평균	기간내 전체 평균	분쟁 시 평균
동아시아	-	-	-	-	-	-
중동아시아	-	2	-	-	0.07	6
유럽	-	-	-	-	-	-
아프리카	-	-	-	-	-	-
남아메리카	-	-	-	-	-	-

출처: Marshall, M.G. (2020) 'Major episodes of political violence (MEPV) and conflict regions, 1946-2018', 데이터 분석치 토대로 저자 정리

분쟁이라는 관점에서 제시한 위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다룰 수 있다. 첫째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무력 분쟁은 냉전 시기의 양극체제(1950-1990)하에서 가장 빈번했고, 탈냉전 시기에 접어들면서 지난 30년간 국가간 무력 분쟁의 발발 빈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다극체제로의 국제질서의 재편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이 ‘무력 분쟁’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불안정해졌다고 단정지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로, 동아시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대국간 패권 경쟁에 의해 야기되는 안보 취약성이 더 크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김학노, 2019). 실제로 동아시아 지역은 냉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국제적인 분쟁의 발발 비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아시아의 안보 정세를 논함에 있어서 지정학적, 지경학적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을 근거로 안보 위기를 전제한 논의가 항상 현실 반영적인 접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국제정치체제에 근간한 전쟁 이론이 강대국간 패권의 변화와 지역 분쟁 취약성 간의 일반적 연관성을 설명하는데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지라도,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정세를 분석하는데 충분한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국제질서의 재편과 안보 논의는 지역적 차원의 국제관계의 특수성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IV. 분석 결과 논의

분쟁학과 평화학 분야 권위자인 티모 키비마키는 그의 저서 <The long peace of East Asia>를 통해, 분쟁학과 평화학의 개념과 이론화가 유럽의 주도로 이루어져 왔지만, 서구의 경험과 시각을 전제로 수립된

이론으로 동아시아의 지역의 평화 유지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Kivimäki, 2016, p.1). 또한, 냉전 종식 이후 동아시아는 유럽을 포함한 그 어느 지역보다 평화적이었음을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그는 서구식 평화 정착 모델을 기준으로 평가한 동아시아는, 지역 내 분쟁 방지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법적 한계를 지니지만, 잠재적 안보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역사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지역 차원에서 기능하는 평화 유지 메커니즘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한다 (Ibid., pp.83-133).⁸⁾ 키비마키의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유지되어 온 장기간의 평화를 ‘분쟁’의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와 관점을 공유한다. 그의 연구는 동아시아의 국가별 분쟁 빈도와 분쟁 관련 사상자(battle-related deaths) 통계를 활용해 보다 미시적으로 지역의 안보 아키텍처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으며, 비교 자료로써 가치가 크다 하겠다. 아래 표4는 키비마키의 연구 중 일부 분석치를 인용한 것이다. 표4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관련 사상자 중 동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⁹⁾ 1980년대 이후 세계 분쟁 사상자 중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분석 방법에 따라 3-7%로 유지되고 있다 (Ibid., p.42).

8) Timo Kivimäki는 동아시아 지역의 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구현하는 세 가지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첫째로, developmentalism, 둘째로, non-interference, 셋째로, face-saving이다. 본 연구의 주요 초점이 동아시아의 평화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논의는 본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9) Timo Kivimäki의 연구(2016)는 1946년부터 2008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가 이후 10년의 데이터를 더해 도출한 결론은 그의 연구가 분석하고 예측한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정세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교 활용가치가 있다.

표 4. 세계 분쟁 사상자 대비 동아시아 분쟁 사상자 비율 (%)

	Low estimate	High estimate	Best estimate	New Best estimate	Low estimate	High estimate	Best Estimate	New Best estimate
동아시아 분쟁 사상자 % (총 사상자 대비) 1980-2008	3	6	3	3	4	7	6	6

출처: Kivimäki, T. (2016) The long peace of East Asia. Routledge, p.42.

그의 분석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강대국의 패권 경쟁의 구도에 서 동아시아의 분쟁과 평화 상태의 변화를 분석했다는 점이다. 그는 국제 질서의 변화를 1. 냉전 전 시기(1946-1949), 2. 냉전시기(1950-1990), 3. 과도기 (1991-2001), 4. 테러와의 전쟁 시기(2002-2008)로 시대 구분 했으며, 각 시기의 동아시아 역내의 분쟁 양태를 국가 별로 비교한다.

표 5. 강대국 패권 구조와 동아시아 분쟁 빈도

	연 평균 분쟁 발생 빈도			
	1946-1949	1950-1990	1991-2001	2002-2008
브루나이	-	0.03	0.00	0.00
캄보디아	1.25	0.78	0.73	0.00
중국	1.25	0.51	0.00	0.00
인도네시아	1.25	0.83	0.64	0.57
일본	0.00	0.00	0.00	0.00
라오스	1.25	0.56	0.00	0.00
말레이시아	0.50	0.54	0.00	0.00

몽골	0.00	0.00	0.00	0.00
미얀마	1.75	4.76	2.64	0.71
한국 (한국/북한)	0.25	0.10	0.00	0.00
필리핀	1.00	1.17	1.64	2.00
싱가폴	0.00	0.00	0.00	0.00
태국	0.25	0.39	0.00	0.86
베트남	1.00	0.90	0.00	0.00
국가 평균	0.98	0.96	0.51	0.47

출처: Kivimäki, T. (2016) *The long peace of East Asia*. Routledge, p.42. p.109

표 5에 나타난 분석 데이터가 내포하는 주요한 시사점은, 동아시아 역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빈도가 국가 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분쟁 취약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키비마키는 동아시아의 안보정세에 강대국 간 패권 역학구조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는 것이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한다(Ibid., p.110). 그의 분석은 강대국의 힘의 균형과 재편에 의한 국제질서 변화가 동아시아 역내 분쟁과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일방향적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국제질서의 재편이 동아시아 지역에 미친 안보적 영향을 논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는 분석 대상의 범위이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국제 무력 분쟁의 관점에서 지역적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국가 간 무력 분쟁을 국가 내부 수준에서 발생하는 분쟁 또는 정치적 혼란 상황과는 구별하여 접근하고 있다. 국제질서의 재편이 역내 국가들의 내부적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또 다른 관점에서 전개될 수 있는 논의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국제 질서의 재편 속에서 발견되는 동아시아 지역의 상대적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동아시아가 내제하고 있는 정치, 군사적 불안정성을 외면하거나 과소평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 표 6-10은 <PITF—State Failure Problem Set: Internal Wars and Failures of Governance, 1955–2018>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1955년부터 2018년 사이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경험한 내부적 분쟁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Marshall, Gurr and Harff, 2019). 다수의 국가들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민주화에 내홍을 겪고 있으며, 민족적 내전, 혁명 전쟁, 비헌법적 정권 교체, 쿠데타, 학살 등 다양한 유형의 내부적 분쟁을 경험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관점과 분석 범위에 따라서는, 세계 어떤 지역과 비교해도 불안정성과 비예측성이 높은 지역인 것도 사실이다.

표 6. 동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한 민족전쟁 (1955–2018)

지역	발발 년도	종료 년도
중국	1956	1959
중국	1988	1998
중국	2009	2015
인도네시아	1967	1971
인도네시아	1975	1991
인도네시아	1981	1984
인도네시아	1997	1999
인도네시아	1998	2005
라오스	1961	1979
미얀마	1948	진행중
미얀마	2017	진행중
필리핀	1972	진행중
태국	2004	진행중

출처: Marshall, M.G., Gurr, T.R. and Harff, B. (2019) ‘PITF—State Failure Problem Set: Internal Wars and Failures of Governance, 1955–2018’, 데이터 분석치 토대로 저자 작성

표 7. 동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한 혁명전쟁 (1955-2018)

지역	발발 년도	종료 년도
캄보디아	1970	1975
캄보디아	1979	1991
중국	1966	1969
중국	1989	1989
인도네시아	1949	1961
인도네시아	1958	1961
인도네시아	1998	1999
라오스	1960	1962
라오스	1963	1979
미얀마	1988	1989
필리핀	1972	1996
태국	1965	1983

출처: Marshall, M.G., Gurr, T.R. and Harff, B. (2019) 'PITF—State Failure Problem Set: Internal Wars and Failures of Governance, 1955-2018', 데이터 분석처 토대로 저자 작성

표 8. 동아시아 국가에서 비헌법적 정권교체 (1955-2018)

지역	발발 년도	종료 년도
캄보디아	1975	1976
캄보디아	1997	1997
캄보디아	2017	2017
인도네시아	1957	1959
라오스	1960	1975
말레이시아	1969	1969
미얀마	1962	1962
필리핀	1969	1972
대한민국	1961	1961
대한민국	1972	1972
싱가폴	1963	1965

태국	1971	1971
태국	1976	1976
태국	2006	2006
태국	2014	2014

출처: Marshall, M.G., Gurr, T.R. and Harff, B. (2019) ‘PITF—State Failure Problem Set: Internal Wars and Failures of Governance, 1955–2018’, 데이터 분석치 토대로 저자 작성

표 9. 동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한 쿠데타 (1955–2018)

지역	발발 년도
대한민국	1961
대한민국	1979-1980
미얀마	1962
미얀마	1988
미얀마	2021
태국	1947
태국	1951
태국	1956
태국	1958
태국	1971
태국	1976
태국	1977
태국	1991
태국	2006
태국	2014
캄보디아	1970
캄보디아	1997
라오스	1960
라오스	1964
인도네시아	1966

출처: Marshall, M.G., Gurr, T.R. and Harff, B. (2019) ‘PITF—State Failure Problem Set: Internal Wars and Failures of Governance, 1955–2018’, 데이터 분석치 토대로 저자 작성

표 10. 동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한 정치 및 종족 학살 (1955-2018)

지역	발발 년도	종료 년도
캄보디아	1975	1979
중국	1959	1959
중국	1966	1975
인도네시아	1965	1966
인도네시아	1975	1992
미얀마	1978	1978
필리핀	1972	1976

출처: Marshall, M.G., Gurr, T.R. and Harff, B. (2019) ‘PITF—State Failure Problem Set: Internal Wars and Failures of Governance, 1955-2018’, 데이터 분석치 토대로 저자 작성

V. 연구의 한계와 의의

본 연구는,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 분쟁의 양상(빈도와 강도)이 1950년대부터 국제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앞선 장에서,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이 다른 대륙에 비해 패권 국가 간 힘의 분배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분쟁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역사적 데이터를 토대로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먼저 본 연구는 국제정치체제의 유형 변화 속에서 시기 별 안보 정세를 비교할 뿐, 극체제 변화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불안정 간 인과성(causality)에 대한 유의미한 통계적 모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또한, 본 연구가 지역의 안보 정세를 진단하기 위해 활용한 데이터의 적용과 해석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 <Major Episodes of Political Violence, 1946-2018>의 데이터세트는 500명 이상의 사상자를 유발한 국제 무력 분쟁에 한한 관측치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5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키지 않은 국제 무력 분쟁 사건은 관측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사용한 데이터세트의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국가와 지역이 안보적 관점에서 안정상태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피격은 분명한 국가간 무력 충돌임과 동시에, 상당한 정도의 안보 위협을 지역에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활용한 데이터 상의 무력 분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석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데이터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한계는 무력 분쟁의 부재 또는 평화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가시적 사회·경제적 비용이 분석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로, 한반도에서는 남북간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해마다 수백만에 이르는 국방 인력 소모와 군사 장비 운용 및 유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무력 분쟁의 빈도를 기준으로 지역의 안보 정세를 진단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 반영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현대전의 양상을 고려해 볼 때, 단 한 번의 큰 무력 충돌로 돌이킬 수 없는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거 무력 분쟁의 빈도를 근거로 지역의 평화를 예단할 수 없음도 분명하다.

이 연구가 지니는 다양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제기하는 문제의식과 목적은 분명하다. 역사적 사료를 기반해, 동아시아 지역의 분쟁 양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극 체제 변화에 대응한 국가 생존 전략 접근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안보 논의의 접근 다각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제 질서의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안보를 접근하는 다수의 연구들은 국제 질서의 변화가 지역에 가하는 안보 위협을 강조하는 동시에, 역내에서 장기간 미결된

지역 차원의 안보 불안 요인을 함께 논의한다. 한반도로 논의를 좁혀 보자면, 안보딜레마는 한국이 만성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지역 차원의 안보 불안 요인들이 강대국의 패권 경쟁의 구도와 맞닿을 때 심화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 질서 재편이 동아시아 지역과 한반도 그리고 대한민국에 미칠 수 있는 안보 위협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질서의 변화와 별개로, 역내의 안보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자체 역량 강화와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접근법의 다양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역내 안보 문제가 애써 강대국의 패권 논리에 휘말려 확대되는 것은 어떠한 측면에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극체제의 재편이 한국에 가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부담을 안보 위협으로 해석해, 대립하는 강대국 사이에서 노선 정립에 대한 논의를 쟁점화하는 것은 역내 안보 이슈를 글로벌 차원으로 불필요하게 확대시킬 수 있으며,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축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가 갖는 궁극적 함의는 국제 질서의 재편에 따른 안보 위기론을 일반화하는 일부 국내 연구에서 발견되는 경향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데 있으며, 추후의 연구에서 불필요한 안보 논의의 양산을 억제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안보 논의의 토대를 끌어내는데 있다 하겠다.

VI. 결론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는 복잡하고 불안정하다. 장기간 지속되어온 역사 문제와 영토 갈등은 국가 간 공정한 협상과 소통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정치, 외교, 경제 영역에서 대치되는 국익과 중첩되는 손익은 협력의 여지를 축소시키는 반면 경쟁을 심화시킨다. 문화, 인종, 종교,

이념 그리고 가치의 이질성으로 인해 국가간 크고 작은 갈등이 상존한다. 더욱이, 국가간 발생하는 갈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제도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규범에 기반한 중재 협력 시스템(rules-based system)의 기반이 서구에 비해 미약하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지정학적, 지경학적 구조로 인해 강대국간 패권 경쟁의 영향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Kim, 2021). 국력과 자원의 비대칭성은 역내 중소국가들의 외교적 자율성을 축소시키고, 중소국가들로 하여금 강대국의 이익에 부응하는 외교 노선을 취하도록 끈임없이 요구한다(조형진, 2021). 특별히, 동아시아는 한반도의 분단에서 파생되는 무력 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만성화된 안보적 취약성을 내포한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불안정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연구의 초점은 동아시아 역내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간 경쟁으로 재편되는 국제질서가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안보 영향’에 대한 정확한 범위 설정과 수준 인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역내에는 앞서 나열한 바와 같이 다양한 분쟁 요인이 존재한다. 또한, 지역에 잠재하는 분쟁 요인이 극체제의 변화에 따라서, 가시화되거나 심화될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영향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편되는 국제질서에 따라 분쟁의 취약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30년간 동아시아는 세계 그 어떤 지역에 비해 국가간 무력 분쟁에 대한 강한 면역을 보이며, 나름의 평화 상태를 유지해 왔다.

전쟁을 경험하고 아직 종전을 마주하지 못한 한국에서 안보 대비 태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강대국간 힘의 재편 현상을 곧바로 한반도 안보 위기 유발 요인으로 일반화해서 대응하는 풍조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질서가 우리의 외교·안보적 계산을 이

전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은 농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외교적, 경제적 전략 수립의 어려움을 ‘안보 위기’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안보 위협에 대한 과대 인식은 과대 안보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극체제 변화가 야기하는 안보 위협 요인의 본질과 대응 수준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 전략이 논의되어야 한다.

동아시아가 실질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안보 위기 상황은 극체제의 변화가 불러올 새로운 안보 위협이 아닌, 장기간 역내에 존재해 왔던 미결되고 만성화된 안보 문제에 의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역내 안보 위협을 자주적이고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역내 안보 문제를 양극체제 또는 다극체제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위에서 아래로의 탑다운 (Top-down approach) 방식은 역내 안보 위협 관리에 강대국의 이익을 더욱 깊이 끌어들이므로써,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의 자주권을 상실하고, 외교적 입지를 스스로 축소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목격했다. 주변 강대국의 안보 이익을 외면하거나 완전한 중립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마주한 안보 위협을 과대 인식해 안보 위협을 실제보다 확대시키고, 이슈를 정치화하고, 불필요한 논의를 재생산하는 것은 강대국의 개입 정당성을 스스로 높여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양자 또는 역내 다자간 협의로 중재될 수 있는 안보 문제에 보다 많은 국가의 이익을 관여시켜 문제를 만성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강대국의 힘의 재편이 동아시아에 불러올 안보 불안정에 대응하는 동시에, 역내의 안보 이슈가 강대국간 경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국지화 시켜 관리하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바텀업 (Bottom-up approach) 접근이 요구된다. 우리의 국익에 필요에 따라서 강대국과 협력을 유연하게 도모하는 것이, 강대국의 이익에 선제적으로 편승하거

나 대치함으로써 역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참고문헌

- Ashraf, N. (2020). Revisiting international relations legacy on hegemony: The decline of American hegemony from comparative perspectives. *Review of economics & political science: REPS*, ahead-of-print(ahead-of-print).
- Bueno de Mesquita, B. (1975). Measuring systemic polarit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9(2): 187-216.
- Burgess, S. F. (2016). Rising bipolarity in the South China Sea: the American rebalance to Asia and China's expansion.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37(1): 111-143.
- Buzan, B. (2021). Russia in the Post-Cold War International Order. *Russia in Global Affairs*, 19(4): 22-35.
- Cassani, A. (2021). COVID-19 and the Democracy-Autocracy Freedom Divide: Reflections on Post-Pandemic Regime Change Scenarios. *Political Studies Review*, 00(0): 1-8.
- Cha, V. D. (2020). Allied Decoupling in an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13(4): 509-536.
- Chan, G. (2013). The Rise of Multipolarity, the Reshaping of Order: China in a Brave New World?. *International journal of China studies*, 4(1): 1-16.
- Christensen, T. J. and Snyder, J. (1990). Chain gangs and passed bucks: Predicting alliance patterns in multipolar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4(2): 137-168.
- Chung, J. H. (2006). 'Between Ally and Partner' in *Between Ally and Partner*. Columbia University Press.
- Cottey, A. (2021). The West, Russia and European security: Still the

- long peace?.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24(2): 207-223.
- Daly, T. G. (2022). ‘The pandemic and the future of global democracy’ in *Routledge Handbook of Law and the COVID-19 Pandemic*. Routledge.
- Deutsch, K. W. and Singer, J. D. (1964). Multipolar power systems and international stability. *World Politics*, 16(3): 390-406.
- Gilpin, R. (1981).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as, M. (1970). International subsystems: stability and polar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1): 98-123.
- Han, S. (2008). From engagement to hedging: South Korea’s new China policy.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0(4): 335-351.
- Ikenberry, G. J. (1998). Institutions, strategic restraint, and the persistence of American postwar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23(3): 43-78.
- Jones, D. M., Bremer, S. A. and Singer, J. D. (1996).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1816-1992: Rationale, coding rules, and empirical patterns.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15(2): 163-213.
- Kang, D. C. (2009). Between balancing and bandwagoning: South Korea’s response to Chin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9(1): 1-28.
- Kaplan, M.A. (1957). Balance of Power, Bipolarity and other Models of International Systems¹.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1(3): 684-695.
- Keohane, R. O. (1984). After hegemony: transatlantic economic relations in the next decade. *The International Spectator*, 19(1): 3-9.

- Kim, S. (2021). An Analysis of the Vulnerabilities in China's Public Diplomacy to the Neighboring Countries during the Xi Jinping Era. *Analyses & Alternatives*, 5(1): 59-85.
- Kivimäki, T. (2016). *The long peace of East Asia*. Routledge.
- Kupchan, C. (2021). Bipolarity is Back: Why It Matters. *The Washington quarterly*, 44(4): 123-139.
- Kuzmarov, J. and Marciano, J. (2017). The Russians Are Coming, Again. *Monthly review*, 69(4): 15-23. (New York. 1949).
- Mansfield, E. D. (1993). Concentration, polarity, and the distribution of powe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7(1): 105-128.
- Marshall, M. G. (2020). Major episodes of political violence (MEPV) and conflict regions, 1946-2018. *Center for Systemic Peace*.
- Marshall, M. G., Gurr, T. R. and Harff, B. (2019). PITF—State Failure Problem Set: Internal Wars and Failures of Governance, 1955–2018. *Societal-Systems Research Inc, Vienna, VA*.
- Mearsheimer, J. J. (1990). Back to the future: Instability in Europe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15(1): 5–56.
- Monteiro, N. P. (2011) Unrest assured: Why unipolarity is not peaceful. *International Security*, 36(3): 9-40.
- Moon, C. (2017). ‘China’s Rise and Security Dynamics on the Korean Peninsula’, in *Strategic Adjustment and the Rise of China*. Cornell University Press.
- Morgenthau, H. J., Thompson, K. W. and Clinton, W. D. (1985).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Y: Random House.
- Muhr, T. (2018). Decline of US Hegemony? A Challenge of ALBA and a New Latin American Integration of the Twenty-First Century -

- edited by Bagley, Bruce M. and Defort, Magdalena.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37(4): 495-497.
- Nye, J.S. (1992). What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71(2): 83-96.
- Organski, A. F. (1968). *World Politics*. (2ed.) New York: Alfred A. Knopf.
- Repucci, S. and Slipowitz, A. (2021). Democracy under siege. *Freedom House* [Preprint].
- Sadri, H. A. and Burns, N. L. (2010). The Georgia crisis: a New Cold War on the horizon?. *Caucasian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4(2): 126-144.
- Sakwa, R. (2019). 'Stasis and Change: Russia and the Emergence of an Anti-hegemonic World Order', in *Russia in the Changing International System*.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Sun, Y. (2021). 미중 강대국 경쟁과 한반도. *한국국가전략*, 6(2): 7-46.
- Thananithichot, S. and Kongdech, K. (2021). Pandemic Backsliding? A Comparative Study of Democracy under the Virus Threat. *Democracy x Innovations Working Paper Series* [Preprint].
- Thompson, W. R. (1986). Polarity, the long cycle, and global power warfar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0(4): 587-615.
- Tyushka, A. (2022) Weaponizing narrative: Russia contesting EUrope's liberal identity, power and hegemony.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30(1): 115-135.
- Waltz, K.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Y: Random House.
- Wohlforth, W. C. (1999). The stability of a unipolar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24(1): 5-41.
- 곽덕환. (2020).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국의 안보전략. *군사발전연구*, 14(1): 1-32.

- 김강녕. (2011).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동북아연구*, 26(2): 1-30.
- 김강녕. (2018). 미중관계의 전개와 현안문제 및 시사점. *한국과 국제사회*, 2(2): 89-130.
- 김동성·정성희. (2016).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대응.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1-178.
- 김상기. (2014). 기로에 선 한반도: 2010년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전략. *한국정치학회보*, 48(5): 229-247.
- 김상배. (2011).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외교전략: 구조적 공백과 위치 권력 이론의 원용. *국제정치논총*, 51(3): 51-77.
- 김상태. (2006).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정치정보연구*, 9(2): 163-186.
- 김선재·김수환. (2022). 탈중국을 위한 대만 남향정책의 지속과 변화: 균형과 편승의 동학. *분석과 대안*, 6(1): 69-114.
- 김수민. (2012). 최근 국제질서 변동에 따른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의 특징. *평화학연구*, 13(4): 129-154.
- 김일수. (2014). 미중의 패권경쟁과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 *대한정치학회보*, 22(4): 79-100.
- 김재관. (2006). 미중 양국의 패권경쟁심화와 상호대응전략의 비교. *국제정치논총*, 46(3): 141-168.
- 김태형. (2014). 1914 vs. 2014: 2014년 동아시아는 1914년 유럽의 재현인가?. *유라시아연구*, 11(2): 83-101.
- 김학노. (2019). 한반도의 지정학적 인식에 대한 재고: 전략적 요충지 통념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53(2): 5-30.
- 민병원. (2014). 국제정치체제 모델의 다양성과 변화: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비교. *한국정치학회보*, 48(2): 183-203.
- 박성화. (20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북핵 해결과 다자협

- 력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2(2): 147-179.
- 박용수. (2020). 미중 패권경쟁과 문재인 정부의 대응전략. *한국동북아논총*, 25(1): 5-27.
- 박인휘. (2020). 강대국정치 (Power politics) 와 미중갈등: 한반도 문제의 연계성. *국가안보와 전략*, 20(4): 1-31.
- 박인휘. (2021). 동북아지역과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 *한국동북아논총*, 26(3): 23-41.
- 박창권. (2013). 미중의 지역내 패권경쟁 가능성과 우리의 전략적 선택 방향. *전략연구*, 57: 193-235.
- 박창희. (2013). 중국의 군사력 증강 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전략연구*, 57: 237-270.
- 박형준. (2019). 지속가능한 새로운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추진 방안: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4(4): 5-25.
- 박희락. (2017). 사드(THAAD) 논란에서 나타난 한국 “동북아시아 균형외교”의 위험. *한국동북아논총*, 85: 145-167.
- 변창구. (2016). 제 6 장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통일전략*, 16(3): 193-220.
- 송세관. (2021). 한국의 바람직한 국방개혁 방향 연구: 동북아 군비경쟁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2(5): 889-899.
- 송윤진. (2017). 동북아시아 국제체제 분쟁의 풍경: 아편전쟁에서 북핵위기까지 양국간 군사분쟁에 대한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82: 133-152.
- 송주명. (2005). 일본의 민족주의 국가전략: “경제대국”을 넘어 “안보대국”으로. *황해문화*, 48: 14-32.
- 신동만. (2015).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 양상과 한국안보. *군사발전연구*, 9(2): 95-115.
- 신재길. (2018).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위의 변화: 핵 무장력 완성의 의

- 미. *정세와노동*, 146: 124-130.
- 신중호. (2014). 기획 시리즈: 동북아 지정학의 부활-중국; 한국, 한반도 문제 주도권 회복해야. *통일한국*, 371: 24-25.
- 윤황. (2010).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의 방향 모색. *평화학연구*, 10(3): 77-104.
- 이근욱. (2017). 동아시아에서의 민족주의와 안보경쟁 가능성: “하나의 중국 원칙”, 해양영토, 그리고 일본 과거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국가전략*, 2(2): 59-81.
- 이삼성. (2008). 동아시아 제국주의의 시대구분: “제국주의 카르텔”로 본 근대 동아시아질서. *국제정치논총*, 48(3): 57-92.
- 이상택·윤성석. (2016). 한국에 대한 중국위협론의 성립 조건과 군사적 함의. *동북아연구*, 31(1): 29-59.
- 이성현. (2020). 미중 경쟁 지정학 속의 북중관계. *국제관계연구*, 25(2): 61-100.
- 이수형. (2008). 국제체제의 변화가 동맹의 유형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 *국방연구*, 51(2): 111-134.
- 이수형. (2012). 남북한 한반도 정치와 강대국 동맹정치 간의 연계성 분석. *세계정치(Journal of World Politics)*, 16.
- 이승근. (2018).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OSCE 모델의 유용성. *JPI Research Series*, 43: 301-312.
- 이정우. (2018). 다자간 안보협력과 군비통제의 모색: 이론과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6(3): 105-130.
- 임재형·이성우. (2019). 동북아시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평화: 미·중·일 관계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20(1): 73-102.
- 장원익·김우상·이상훈. (2007). 극 체제와 강대국 전쟁. *한국정치학회보*, 41(1): 255-274.
- 전봉근. (2017). 미중 경쟁시대의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국 안보. *주요국*

제문제분석 [Preprint].

- 전성훈. (2018). 21세기 강대국 경쟁시대에 북한 핵문제의 진로. *북한학보*, 43(1): 4-32.
- 전재성. (2014). 동아시아 국제정치 질서에 대한 체제 차원 분석: 복합조직원리론의 관점에서. *국제지역연구*, 18(4): 3-28.
- 정경영. (2012). 동북아 질서 재편과 한국의 안보전략. *군사발전연구*, 6(1): 173-211.
- 정구연. (2020). 아세안 (ASEAN) 국가들의 헤징과 동아시아 안보아키텍처의 변화 전망: 대미·대중 군사외교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5(2): 27-51.
- 정한범. (2016). 동북아: 전통적 강자들의 귀환과 위기시나리오. *국제정치연구*, 19(1): 185-213.
- 조경근. (2020).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 안보-군사비와 군사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전략*, 20(3): 157-190.
- 조립신. (2012). 민족주의와 동아시아의 “분열”. *중국학*, 43: 251-268.
- 조비연. (2021). 미중 간 전략경쟁과 여타 중견국의 균형-편승 스펙트럼. *국제지역연구*, 30(4): 69-110.
- 조한승. (2005). 양자적 분쟁에 대한 상대적 국력의 영향력: 적대수준의 상승적 관점 (escalatory perspective)에서. *국제정치논총*, 45(2): 29-56.
- 조형진. (2021). 중국의 비공식적 경제 제재. *분석과 대안*, 5(1): 25-57.
- 차정미. (2017).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위협인식과 대응전략-힘, 정체성, 지정학 요인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21(2): 39-93.
- 최태강. (2014). 기획 시리즈: 동북아 지정학의 부활-러시아; 나진항 사업, 남, 북, 러 경제적 연계 촉진 시발점. *통일한국*, 370: 24-25.
- 허원영. (2020). 일본의 지정학적 인식 변화와 해양안전보장: 냉전 후기의 위협인식 변화와 시레인 방위. *한일군사문화연구*, 30: 37-62.
- 현인택. (2021). 마 중 패권전쟁과 한국의 생존전략. *신아시아*, 28(2): 57-69.

- 홍우택. (2007). 상대적 국력이 국가간 협력에 미치는 영향: 경험분석을 통한 전쟁이론의 확장. *세계지역연구논총*, 25(2): 267-286.
- 황재호. (2014).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군사력 평가와 전망. *전략연구*, 21(62): 5-33.

Manuscript: Jun 14, 2022; Review completed: Jun 23, 2022; Accepted: Jul 10, 2022